

법과 교칙 사이 고교생 유권자들 '혼란'

광주·전남 고교 90여곳 학생 정치활동·정당가입 금지 및 징계 최고 퇴학까지...시대 흐름 못 읽는 30~40년 전 교칙 개선 여론

선거법정점으로 선거연령이 만 18세로 낮아졌지만 학생들의 정치활동·정당가입을 금지하거나 징계하는 수십 년전 교칙을 상당수 학교들이 고수하면서 고3학생과 교사가 혼란을 겪고 있다.

만 18세 이상 청소년이면 사회 분별력과 정치 의식 수준이 투표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하다는 국민적·정치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선거연령이 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고교들이 시대 흐름을 읽지 못한 채 안일하게 30~40년 전 교칙에 매달려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고교들이 정치활동·정당가입 금지 수준을 넘어 퇴학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교칙에 명시한 것은 유신시대 고교생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이 시대가 지나도 여과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전남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209개 고교 가운데 90여개

교 이상의 교칙(학교생활인권규정)에 정치활동·정당 가입 금지 및 징계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생회 외에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사회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및 활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하면 학교장이 선도위원회 등에 회부해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광주시 북구의 한 사립고는 교칙에 정치 활동 금지 항목을 두고 생활교육규정 징계 조항에 따라 정치에 관여한 학생에 대해 최고 퇴학 처분까지 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의 한 공립고도 학생자치회 구성 규칙으로 학생회의 회원은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으나, 정당 또는 정치적 성향을 띤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활동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 역시 최고 징계가 퇴학으로, 시범 부

정보다 처벌이 무거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교칙이 정당법 위반이기도 하고 민주주의 함양을 위한 유권자 교육을 통해 정당한 정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민주·인권교육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제22조 1항(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은 다른 법령이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더라도 국회의원 선거권자라면 누구나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고교에서는 '일부 학생에게만 선거권이 부여된다는 학생이라는 특수신분으로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모두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 선거권을 가진 일부 고3이 입시에 치중하지 정치활동에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어 혼선을 겪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현행법과 학교 규칙의 대립으로 법률 다름이 불가피한 상황이고, 고3이 사실상 정치활동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고교생 정치활동 징계 규정은 사문

화된 만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경미 광주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일선 학교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교육자료를 보내 학생유권자의 정치활동(정당 가입 등)을 금지하고 있는 학생생활수칙을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개정할 수 있도록 전체 고등학교에 안내한 상태"라면서도 "개정된 선거법으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생유권자의 올바른 선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많은 학교가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관리감독 기관인 교육청과 각 학교의 의지 부족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사도교육청은 학교의 교칙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권을 갖는 고등학교 재학생 유권자는 광주 5300여 명, 전남 6000여 명으로 총 1만 13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전두환씨, 조만간 광주 출석하세요”

사자명예훼손 새 재판장에 김정훈 부장판사 재판부 바뀌어 인정신문할 때 법정 출석해야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전두환(89)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해야 될 처지에 놓였다.

18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받고 있는 전두환씨 사건의 새 재판장으로 김정훈(47·사법연수원 33기) 부장판사가 배정됐다.

기존 전씨 사건을 담당했던 장동혁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3기)가 총선 출마를 위해 사직한 데 따른 것으로, 재판부 변경으로 전씨의 재판 출석이 불가피해졌다는 게 법조계 분석이다.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절차를 갱신해야 하고 이 경우 인정신문을 해야하는데, '피고인은 인정신문을 진행하는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인정신문은

성명, 연령, 등록기준지, 주거, 직업을 물어 출석한 자가 피고인임에 틀림없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다.

전씨는 지난해 4월 법률대리인을 통해 제출한 '피고인 불출석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여태껏 재판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선임돼 있고 피고인 스스로 건강 등 사유로 출석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불출석을 허가한 바 있다. 다만, 선고 공판 때는 출석해야 한다.

한편, 광주지법은 이번 인사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전담판사로 지만원씨 1심 재판을 담당했던 김태호(43·사법연수원 34기) 판사를 배정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해임 앙심 총장 비리 폭로 협박 전직 교수 집행유예 2년 선고

표절 논문으로 논문게재비와 성과급 연구보조비를 받아 챙겼다가 발각돼 해임된 자 대학과 총장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무안 모 대학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진환 판사는 논문 표절 사실이 드러나 해임된 뒤 앙심을 품고 해당 대학과 총장 비리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안 모 대학 전직 교수 A(6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표절한 논문으로 7차례에 걸쳐 논문 게재비 240만원을 대학에서 받아 챙기고 표절 논문으로 5차례에 걸쳐 성과급 연구보조비 91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또 표절 사실이 드러나 해임되자 대학 직원 채용과 운영상 비리, 총장 개인 비리를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대학 측에 발송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장은 "다수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발각돼 해임되고도 지속하지 않고 복직을 관철하기 위해 학교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고 총장을 압박하기 위해 비리를 언론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면서도 "다만,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논문게재비와 연구보조비 상당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용 기자 dok2000@kwangju.co.kr



18일 광주시 북구 풍향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들이 지난 밤사이 내린 눈으로 얼어붙은 도로를 치우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2% 부족한 제설작업...이면도로·인도 낙상사고 잇따라

광주·전남지역에 이틀 동안 내린 첫 눈에 대한 제설 대책이 미흡해 빙판길 교통사고와 낙상사고가 잇따랐다.

18일 광주시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난 17일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구조대가 출동한 광주지역 빙판길 안전사고는 모두 19건으로, 쌓인 눈이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빙판길이 된 인도와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일어난 낙상사고로 파악됐다.

지자체가 직접 나서 눈을 치운 주요 간선도로와 달리, 주택가 이면도로나 경사로, 인도 등 제설 사각지대는 광주 5개 구가 인력 부족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주민들 손에 제설을 의존해야 하는 탓에 제대로 제설·제빙 작업이 이뤄지기 힘들었다는 점도 한 원인으로 꼽혔다.

빙판길 교통사고도 잇따랐다. 지난 17일 오후 8시경 광주시 북구 신안동 한국하이빌 아파트 앞 도로에서 전남대 방향으로 가던 차량 7대가 빙판길에 미끄러지

면서 추돌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다.

인도나 주택가 이면도로의 경우 적극적인 눈 치우기에 나선 시민들도 찾기 쉽지 않은 현실인데다, 영하의 날씨에 빙판길로 변했지만 얼음을 깰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춘 주택도 드물고 취약계층인 노인들의 경우 두껍게 얼어붙은 눈을 깨는 제빙 작업에 선뜻 나서기도 힘든 점을 감안, 자치구가 취약지역을 선정해 직접 제설·제빙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김석균 전 해양청장 등 지휘부 11명 기소

세월호 특수단 출범 100일만에 김석균(55)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양지휘부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18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최상환 전 해양차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날은 지난해 11월 11일 특수단이 출범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

이들 11명 중 김 전 청장과 김 전 서해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과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유연식 전 서해해경청 상황담당관 등 6명에 대해서는 지난날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특수단은 구속영장 재청구가 현실적으

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기소하는 방안을 택했다.

김 전 청장 등 10명은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벗어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김 전 목포목포해경서장 등 2명은 사고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 및 직권남용관리행사방해)도 받는다.

특수단은 세월호 관련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 같은 달 22일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연협뉴스

4억짜리 전기버스, 철제 구조물 끼여 파손...4개월만에 운행 중단

○...광주시의 4억 4000만원짜리 친환경 전기 시내버스가 대형 트럭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다리 앞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에 끼는 바람에 운행 4개월 만에 중단.

○...18일 광주광역시경찰 등에 따르면 '일곡 28번' 전기 시내버스가 이날 오전 10시께 차량 정비를 위해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광주시 광산구 선암동 평동대교 인근 도로를 지나다 도로 위에 설치된 철제 구조물

(제한 높이 3m)에 끼어 파손됐다는 것. ○...전기 시내버스가 긴 철제 구조물은 3m 이상 차량 통과가 불가능한 평동대교로 진입 차량을 막기 위해 설치된 교량충돌방지 시설물로, 경찰 관계자는 "이날 운행 중 차량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자 점검을 위해 광주시 광산구 평동 차량 정비소로 가던 중 충돌방지시설물 설치 여부를 몰랐던 운전사가 도로로 진입하면서 사고가 났다"고 설명.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신협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사채 정리 운동 실시 기간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